



주간통일정세 2012-14(2012.03.26~04.01)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2-14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김일성 100회 생일 맞아 교복 공급(3/26, 조선신보)**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6일 "2012년 국내 방직 및 피복공업 앞에 나선 주요과업의 하나는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돌을 맞는 태양절에 즈음해 전국의 모든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학생들에게 새 교복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현재 전국의 여러 피복공장에서 교복생산이 한창"이라고 전함.
 - 교복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평양 소재 창광옷공장을 소개하며 "이곳 공장에는 교복생산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마다 조사한 학생들의 몸 치수에 맞게 하나하나 생산된다"며 "원자재는 김정숙평양방직 공장에서 생산된 천을 비롯한 국내산이 기본"이라고 밝힘.
 - 신문은 "교복생산은 거의 마감단계로 들어섰다"며 "지난 3월5일부터는 (옷 공장) 종업원 이외에도 가정부인과 집에서 연로보장을 받는(정년퇴직을 한) 노인들도 교복생산을 도와나서고 있다"고 전함.

- **北인민군, 김정은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3/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열린 인민군 당 대표회에서 노동당 대표자회 대표로 추대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 대표회가 26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며 "대표회에서는 전체 인민군 장병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을 반영하여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할 데 대한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힘.
 - 이날 김정각 인민군 총정치국 1부국장은 추대사에서 "김일성 동지의 위업, 김정일 동지의 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자는 것이 인민군대가 시대와 혁명 앞에 다지는 엄숙한 맹세"라며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업과 조국통일 위업의 승리를 위해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대표자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 것을 제의한다"고 전함.

- **北김정은, 김정일 애도 주민에 감사문(3/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애도를 표한 북한 주민에게 감사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전함.
 - 김 부위원장은 감사문에서 "나는 김정일 동지의 서거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 장군님(김정일)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유훈 관철에 용기백배해 떨쳐나선 전체 당원, 인민군 장병과 인민들, 해외동포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밝힘.

- **北평남도당, 김정은 당대표자회 대표 추대(3/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평안남도 당대표회가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전함.
 - 당대표자회 대표자 선거를 위한 평안남도 당대표회는 27일 평성시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 홍인범 평안남도당 책임비서는 추대사에서 "김정은 동지는 선군 조선의 운명이 고 미래"라며 "평안남도의 당원과 인민들의 의사와 염원을 담아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대표자회 대표로 추대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함.

- **北평양시당, 김정은 당대표자회 대표 추대(3/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 평양시당은 28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평양시 당대표회를 열어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전함.

- **北 시·도 당대표회 행사 마무리(4/1,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이 자강도, 황해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나선시 당대표회를 열어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전함.
 - 이로써 북한은 특별시를 포함한 모든 시·도에서 당대표회를 열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당대표자회 대표 선출을 마쳤으며, 김 부위원장은 이미 평양시를 비롯한 주요 시·도의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돼 있음.
 - 노동당 규약에는 당 대표자회에 참가할 대표자를 차하급 당 조직의 대표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음.

- **김일성 100회 생일기념 '국제축전' 11일 개막(4/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기념하는 '국제축전'이 백두산과 평양에서 1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
 - 통신은 "축전기간 만경대 고향집 방문 및 기념식수, 백두산 밀영고향집 방문,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 기념 국제연환대회, 백두산 3대장군 위대성도서·흠모작품전시회 및 국제문예작품 현상모집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밝혔음.
 - 통신은 이 축전에 국제준비위원회와 지역별, 나라별 준비위원회 대표, 김일성과 김정일 집권자와 그 후손, 세계 여러 나라의 명망가 등 수백명의 외국대표가 참가한다고 전함.



■ 김정은 동향

- 3/27 김정은 부위원장, 3.26 김정일 사망에 애도를 표한 전체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감사문」 전달(3.27, 중방·중통)
- 대표회에서는 집행부가 선거되었으며, 김정각(총정치국 제1부국장)의 '추대사'와 리영호·김원홍·정명도 등 토론 및 당대표자회에 보낼 대표자들을 선거했음.
- 3/29 김정은 부위원장, 새학년을 맞은 평양시 교육부문 단위들에 컴퓨터·수자식 촬영기·사진기 등 90종·수천점의 현대적인 교육설비·체육기자재를 전달(3.29, 중통·노동신문)

■ 기타 (대내 정치)

- 黨 조선인민군대표회, 3.26 4.25문화회관에서 김정은 부위원장을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3.27, 중방·중통)
- 김정일 위원장 死後 100일간 '인민경제 선행·기초공업부문 등 성과' 선전(3.26, 중통/정신력이 안아온 충정의 100일)
- 평안남도대표회, 3.27 평성시에서 김정은 부위원장을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3.28, 중통·중방·노동신문)
- 김영남, 홍인범(평안남도 당책), 양홍주(道당 비서), 안극태(道인민위원장) 등 참가
- 평양시 당대표회, 3.28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정은 부위원장을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3.28, 중통·중방)
- 문경덕(평양시당 책임비서), 리일환(평양시당 비서), 김정호(평양시 인민보안국장), 량만길(평양시 인민위원장), 성자립(김일성대 총장/고등교육상), 리군철(평양시 청년동맹 1비서) 등 참석
- 김정일 위원장 著作(주체사상에 대하여) 발표(3.31) 30돌 기념 중앙연구토론회, 3.29 김기남(黨 비서)·김용진(내각부총리) 등 참가下 진행(3.29, 중통·중방)
- 자강도·황해남도·평안북도·강원도·라선시 당대표회, 김정은 부위원장을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4.1, 중통)
- 김일성 생일 100돌 기념 국제축전(국제준비위원회·조선준비위원회 공동), 4.11~16 백두산과 평양에서 진행(만경대고향집 방문 등) 예정(4.1, 중통·중방)

나. 경제

● 北, 작년 대 EU 교역서 최대흑자(3/27,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지난해 유럽연합(EU)과 교역에서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함.
-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1년 대북교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對)EU 수출은 1억2천180만 유로로 2010년(9천900만 유로)



보다 23.3% 늘어난 반면 수입은 전년도(6천800만 유로)보다 40.3% 줄어든 4천60만 유로에 그쳐 8천120만 유로의 흑자를 기록함.

- 북한의 수출품 가운데 석유와 광물이 7천100만 유로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고, 의류 2천300만 유로, 기계류와 수송장비가 1천만 유로이고 북한이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기계류와 수송장비로 1천400만 유로이며, 기타 제조업 제품 1천100만 유로, 농산품이 700만 유로 등이었음.

- 기타 (대내 경제)
 - 김일성 생일 100돌 관련 공로 있는 인민경제 선행부문·기초공업부문 일꾼-근로자들 표창식, 3.29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3.30,중통)

다. 군사

- 北 "위성발사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3/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7일 "우리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고 경제 발전의 필수적 요구인 평화적 위성발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돌을 맞으며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은 김정일 장군의 유훈이며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추진돼온 정상적인 사업"이라며 "(미국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으려는 대결관념에서 벗어나 우리에게도 남들과 똑같이 위성발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함.
 - 대변인은 "우리는 조미(북미)고위급회담들에서 평화적 위성 발사가 장거리미사일 발사 임시중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종일관하게 주장했다"며 "그 결과 2·29 조미합의에는 '위성발사를 포함한 장거리미사일 발사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가 아니라 '장거리미사일 발사 임시중지'로 명기된 것"이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미 국가항공우주국에도 전문가들을 보내라고 초청했으므로 그들이 와서 우리 위성발사의 평화적 성격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의 위성발사에 대해 이중기준을 적용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가에 따라 미국 최고당국자의 발언이 진심인가 위선인가를 판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 北 로켓 연료주입 시작...12~13일 발사(3/29, 도쿄신문)
 - 일본의 도쿄신문은 북한이 위성 발사를 위해 로켓에 연료주입을 시작했으며, 오는 12~13쯤 발사할 것이라고 29일 보도



-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북한 정권에 가까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전했다. 북한이 발사 예정인 로켓에 액체 연료 주입을 시작했으며, 소식통이 "위성 발사가 임박해 있다. 다음달 12~13일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보도

라. 사회·문화

● 대만 여행업계, 북-중-러 3국 관광사업 추진(3/28, 자유아시아방송(RFA))

- 대만 여행사들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잇는 동북아 3개국 관광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국 측에 참여를 타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
- RFA는 11개 대만 여행사 대표로 구성된 첫 관광팀이 지난주 북한, 중국, 러시아의 주요 국경도시를 둘러보는 3개국 순회 시범관광에 참여했고, 대만 관광업계가 3개국 순회관광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중국 훈춘시 웹사이트를 인용해 전함.

● 北 "4월에 금강산 찾는 모든 관광객 환영"(4/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1일 4월에 금강산을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을 환영하며 그들이 관광을 즐기도록 성의와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세계의 많은 관광객과 관광업체들이 금강산 국제관광에 적극 참여하려는 의향을 표시하면서 관광신청과 관광계약, 관광시설운영, 투자 등을 제기해 오고 있다"며 "우리의 해당 단위들에서는 관광객의 출입국과 운수수단, 편의보장을 비롯한 모든 준비를 성과적으로 갖춰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4.1 남측 정부 당국의 '北 금강산국제관광 방해 해외공작책동'을 주장하며 이는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 및 금강산관광 선전 '담화' 발표 (4.1, 중 통·중·평방)

2. 대외정세

가. 일반

● 北 "유엔 북한인권 결의 단호히 배격"(3/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은 26일 조선중앙통신 기사와 문답을 통해 "적대 세력들은 유엔인권이사회 제19차 회의에서 해마다 벌이는 상투적인 반



- 공화국 '결의' 채택놀음을 되풀이했다"며 "적대세력들의 역겨운 광대놀음의 산물인 반공화국 결의를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고 밝힘.
- 대변인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해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를 어찌보려는 시도는 가소로운 망상"이라며 "우리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과 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우리 인민이 선택한 자주 의 길, 선군의 길을 따라 오직 곧바로 나갈 것"이라고 주장함.
- **北 이틀째 오바마 대통령 실명비난(3/27,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7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미국 최고당국자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평화적 과학기술 위성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로 걸고 들었다며 '미국 최고당국자란 표현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겨냥함.
 -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적대적 의사가 없다고 말은 하지만 고질적인 대결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적 위성발사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만 보이는 것"이라고 비난함.
 -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제 코나 씻으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오바마가 미국의 병집은 뒤로 감추고 우리 공화국이 어떻게 다는 식으로 아닌보살한(시치미를 떼고 모른 척한) 걸 보면 그도 어지간히 낮가죽이 두껍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함.
 - **日 방위상, 자위대에 北로켓 요격 준비 지시(3/27, 연합뉴스)**
 -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일본 방위상은 4월 중순 발사될 북한 로켓이 일본 영토에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 요격용 미사일을 배치하도록 27일 자위대에 지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방위청 관리들은 이 지시에 따라 자위대가 지대공 패트리엇-3 미사일과 함대공 스탠더드 미사일-3를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 배치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힘.
 - **北 '발사계획 취소' 요구 潘총장 실명비난(3/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8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장거리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 발사계획을 유엔결의 위반이라며 철회를 요구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실명비난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엔사무총장 반기문이 우리의 '광명성 3호' 발사문제를 놓고 국제기구 수장의 격에 맞지 않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며 "동족으로서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환영하고 좋게 보지는 못할망정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동조하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유엔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처사"라고 비난함.
 - 논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는 주권국가인 우리 공화국



의 합법적인 위성발사 권리를 부정한 미국과 그에 추종한 이사회들의 불법무도한 강권행위에 의해 산생된 추악한 음모의 산물"이라며 "유엔이 우리의 위성발사를 문제시하고 '결의'를 채택한 것은 명백히 우주의 개발과 이용에서의 이중기준"이라고 주장함.

● **日, 대북 제재 연장 방침(3/28, 교도통신)**

- 28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현안의 해결을 위한 북한의 구체적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함.

● **北 "일본 북한인권 부각은 과거청산 회피 의도"(3/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너절하고 고약한 행위란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납치문제를 구실로 우리의 인권문제를 의도적으로 부각하려는 데는 조일 관계의 기본이 마치 납치문제인 것처럼 왜곡해 과거청산을 교묘하게 회피하려는 어리석은 기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함.
- 논평은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저들이 심각한 인권문제들은 무시하고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운운한 것은 언어도단이며 선택성, 이중기준의 극치"라며 "기관은 정치 난쟁이 일본이 해마다 반공화국 결의 채택의 고정 돌격대로 나서서 악랄하게 책동하는 것"이라고 일본을 비난함.
- 논평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조선인 강제연행과 위안부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일본의 인권 타령은 저들의 불미한 과거와 현재의 인권유린행위를 가리기 위한 연막"이라고 주장함.

● **美하원 외교위, 북한인권법 5년 연장(3/28, 연합뉴스)**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법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에 도 불구하고 북한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상태"라면서 "탈북자들의 상황도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으며 특히 법안은 최근 국제사회 이슈로 부각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도 언급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 **美 "로켓발사時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종합)(3/29, 연합뉴스)**

- 제임스 밀러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 "강행한다면 향후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밀러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존 매케인(공화. 애리조나) 상원의원의 대북 식량(영양)지원 관련 질의에 "로켓 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런 지원과 앞으로 취할 예정이었던 다른 (대북)



조치들을 중단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으며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한다면 식량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매케인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내 생각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함.

● **韓中日 외무, 4월7~8일 中서 北로켓 등 논의(3/29,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 일본 외무장관은 오는 4월 7~8일 이틀간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서 만나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광명성 3호 문제 등 지역과 국제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베이징의 중국과 일본 관리들이 29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날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회담한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힘.

● **美 "재미한인-北이산가족 상봉 계속 추진"(3/29, 연합뉴스)**

- 미국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 재미 한국인의 북한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이와 별개로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북한 로켓발사와 재미 한국인 이산가족 상봉 사업의 연관성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이는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고 답함.
- 국무부는 "미국적십자사(ARC)는 인도주의 사업의 일환으로 전세계 이산가족 상봉을 돕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전 이후 한국계 미국인들의 북한내 가족 재회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함.

● **美, 北광명3호 발사대비 이동 레이더 배치(3/30, CNN)**

- 미국이 다음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로켓 발사 계획에 대비해 첨단 이동식 레이더를 태평양 지역으로 파견했다고 전함.
- CNN 인터넷판은 미군이 첨단 이동식 레이더인 SBX(Sea Based X-Band Rader)-1을 지난 23일 하와이 진주만에서 출항시켰다고 30일 보도
- 미군이 출항시킨 SBX-1 레이더는 바다에 뜨는 구조물에 설치돼 있고, 목표물을 찾거나 추적할 수 있으며 알래스카 기지와 캘리포니아 공군기지의 요격 미사일과 교신할 수 있음.

● **北 "美 식량지원 중단은 2·29 조미합의 위반"(3/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이 대북 식량지원 중단을 선언한 미국을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했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인도주의적 문제는 정치와 연관시키지 않는다고 표방하던 미국이 우리의 위성(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해 식량지원 공약의 이행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며 "이것은 2·29 조미합의의 핵심사



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조미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는 유감 천만 한 행위로 될 것"이라고 비난했음.

-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의 위성 발사를 한사코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몰아붙이려는 데는 나름대로 추구하고 있는 정치군사적 목적이 있다"며 "미국은 우리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이 '미국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떠들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모든 나라가 다 반대하는 저들의 미사일 방위체계 수립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써먹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 기타 (대외 일반)

- 北 '외무성' 대변인, 3.26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對北 인권결의' 채택 (3.22, 제네바) 관련 "반공화국 결의"라고 비난(3.26, 중통)
- [北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 질의답변] 美 오바마 대통령의 장거리 로켓 관련 발언(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 '미국은 평화적 위성발사에 대해 이중기준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3.27, 중통)
- 南이 '광명성-3호 발사를 중대한 도발행위(핵무기 운반수단 개발, 장거리 로켓 발사 등)로 왜곡하고 있다'며 '김일성민족의 새 100년대를 축복하며 창공높이 치솟아 반공화국 궤변들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주장(3.28, 우리민족끼리/민족의 경사에 칼질해 보려는 어리석은 궤변)
- 조선우주공간기술위 우주개발국 부국장, 3.28 '광명성-3호' 발사 관련 「중통」 기자와 회견(3.28, 중통)
 - △지구관측위성으로 산림자원분포와 자연재해 정도, 기상예보 등 수집, △위성 질량은 100kg, 고도 500km 궤도를 따라 돌며 수명은 2년, △외국 전문가·기자들은 서해 발사장지에서 실물 위성, 평양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발사상황 참관 예정
-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회견, 3.31 미국의 대북식량지원 중단 발표를 '2.29 조·미합의 핵심사항 위반'이라고 비난하며 '이제라도 주권국가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인정하고, 적대의사가 없다고 한 말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일 것' 주장(3.31, 중통)
- 美·日 등 주변국들의 분별없는 망동('광명성-3호' 발사를 미사일 발사로 왜곡, 이지스함 배치 등)이 '조선반도 비핵화 과정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침략세력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3.31, 중통·노동신문/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은 초미의 과제)

나. 6자회담(북핵)

● 美 "6자회담국과 北로켓 후속조치 협의중"(3/30,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30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 "동맹국 및 6자회담 참가국들과 '후속 조치(next steps)'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미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으며, 중국 등 다른 나라도 역시 이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시했다"고 전한 뒤 이같이 설명했다.
- 이는 미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 논의 등을 포함한 제재 방안에 대해 이미 한국 등과 구체적인 협의에 나섰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됨.

● 6자회담 당사국들, 北로켓 관련 다각 접촉(3/31, 연합뉴스)

-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방침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고 31일 연합뉴스가 전함.
- 미국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외교채널을 통해 긴밀하게 공조대책을 협의하고 있음.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미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으며, 중국 등 다른 나라도 역시 이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시했다"면서 "동맹국 및 6자회담 참가국들과 '후속 조치(next steps)'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타 (6자회담(북핵))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의제에도 없는 북핵·미사일발사 문제 거론, 反北 압살 공공이판, 명분없는 국제회의였다'고 혹평(3.28, 우리민족끼리/반공화국 대결판으로 전략된 회의, 명분없는 국제회의 등)

3. 대남정세

● 北 "반공화국·총선용 핵소동"(3/26, 우리민족끼리; 평양방송)

-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6일 '국제적 망신을 부르는 전쟁소동'이란 논평을 통해 "괴뢰들이 핵안전수뇌자회의를 계기로 북침전쟁소동을 극대화하는 목적은 정세를 최대한 격화시키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몰아붙여 국제적인 반공화국 핵 공조를 이루어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함.
- 이어 "북침 핵 공격 위협으로 되는 군사적 광란 속에서 '핵 안전'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며 수치"라고 맹비난했으며 이번 행사가 '총선용'이라는 주장도 되풀이함.
- 우리민족끼리는 '통하지 않는 상투적 수법'이란 논평에서 "괴뢰패당이 총선을 앞두고 북남관계를 파탄과 대결상태로 몰아간 죄악을 가리고 남조선 각계층의 반감을 녹젓혀보기(누르기) 위해... 서울 핵안전수뇌자회의의 '천안호사건 2주년'이니 하며 반공화국 대결 캠페니아(캠페인)를



미친 듯이 벌려놓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격에 어울리지 않는 잡소리로 세상 사람들을 웃기지 말고 남조선 인민들이 우려하는 원자력발전소 안전문제부터 풀어야 할 것"이라고 역공함.

- 방송은 "이번 서울 핵안전수뇌자회의의 주요 의제는 핵물질의 사용 최소화와 안전관리 및 불법거래 방지"라며 "우리는 이와 관련한 원칙적 입장을 천명했고 핵물질 보유 및 관리에서 국제적 규범이 철저히 준수되고 있음을 명백히 밝혀 북핵문제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회의에 상정될 아무 명분도 없다"고 목청을 높임.

● **北조평통 '광명성 3호' 발사강행 거듭 밝혀(3/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30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중지를 위한 분위기 조성엔 나선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발사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 전함.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을 통해 "이번 회의기간 이명박 역적패당은 의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의 핵억제력과 '광명성 3호' 발사계획을 악랄하게 걸고들며 반공화국 모략소동에 미쳐 날뛰는 추태를 부렸다"며 "이명박패당이 국제회의를 동족대결의 모의판으로 만들려고 광분한 것은 우리에게 대한 극악한 도발이고 민족의 수치"라고 비난했음.

● **류우익 "北 미사일 발사땀 필요한 조치 취한다"(3/30, 아사히신문)**

-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31일 보도
- 이 신문에 의하면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으로 보이는 위성을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음.
- 그는 '필요한 조치'와 관련 "모든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다"고 밝혔지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음.

● **北조평통 "南총선서 이명박 심판해야"(3/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1일 "남조선 인민들은 온갖 불행과 재앙의 화근인 이명박 역적무리를 단호히 심판해야 할 것"이란 내용의 보도를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음.
-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를 통해 "지금 남조선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박두해오면서 민주개혁세력과 보수세력 사이의 대결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며 "역적패당은 저들에게 불리한 선거국면을 역전시켜 추악한 잔명을 부지하기 위해 비열한 북풍조작 책동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



■ 기타 (대남)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에 대해 "국제적인 반공화국 핵공조"라고 지속 선동 비난(3.26,우리민족끼리/국제적 망신을 부르는 전쟁소동)
- 통일부 장관의 對北발언(실패한 사회주의 독재국가)에 대해 "북남 관계를 완전히 결단낸 자의 파렴치한 낫두리" 등으로 비난(3.29,우리민족끼리/본성을 더욱 명백히 드러낸 대결광)
 - '北 장거리미사일' 발사 지적(도발이자 위협 등)에 대해서도 "민족의 감정을 떠난 로봇인간"이라고 南 인터넷 글 인용 비난(3.29,우리민족끼리/새로 붙은 별명 인간 로봇)
- '2012 핵안보정상회의' 준비 및 '북 천안함 폭침' 2주년 행사(안보태세 점검·추모식 등)를 "북풍을 조작하여 총선에 써먹기 위한 술책"이라고 지속 비난 선동(4.1,평방·노동신문/대가를 치르게 될 너절한 모략소동)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 "6자회담국과 北로켓 후속조치 협의중"(3/31)

- 미국 정부는 30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 "동맹국 및 6자회담 참가국들과 '후속 조치(next steps)'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미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으며, 중국 등 다른 나라도 역시 이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시했다"고 전한 뒤 이같이 설명했다. 이는 미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 논의 등을 포함한 제재 방안에 대해 이미 한국 등과 구체적인 협의에 나섰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됨.
- 그는 또 일본 정부가 북한 로켓에 대한 요격을 준비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는 데 언급, "우리는 일본 및 역내 다른 동맹국들과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은 실수(mistake)로, 취소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계획을 강행할 경우 모든 약속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이밖에 토너 부대변인은 북한의 로켓발사 계획 발표 이후 북미접촉 여부에 대한 질문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으며, 한·미·일 3자협의 일정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 <6자회담 당사국들, 北로켓 관련 다각 접촉>(4/1)

-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방침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음. 미국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외교채널을 통해 긴밀하게 공조대책을 협의하고 있음.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미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으며, 중국 등 다른 나라도 역시 이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시했다"면서 "동맹국 및 6자회담 참가국들과 '후속 조치(next steps)'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 논의 등을 포함한 제재 방안에 대해 이미 한국 등과 구체적인 협의에 나섰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됨.
-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특히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의 로켓발사와 관련



한 정보교환 및 공조대책을 집중 논의 중이다. 동시에 북한이 로켓발사와 관련해 강경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로켓 발사가 실제 이뤄진 직후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을 통해 유엔 안보리 회부 등 대북제재 방안을 집중 협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은 4월12일 전후로 진행될 북한의 광명성 3호 로켓 발사 계획에 대비해 첨단 이동식 레이더를 태평양 지역으로 파견했다고 CNN 인터넷 판이 30일 보도했음. CNN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23일 하와이 진주만에서 첨단 이동식 레이더인 SBX(Sea Based X-Band Rader)-1을 출항시켰음. 미군이 출항시킨 SBX-1 레이더는 바다에 뜨는 구조물에 설치돼 있고, 목표물을 찾거나 추적할 수 있으며, 알래스카 기지와 캘리포니아 공군기지의 요격 미사일과 교신할 수 있음.
- 일본의 6자 회담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북한 로켓발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일 미국을 방문함. 스기야마 국장은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미국 측 관계자들과 만나 양국 공조 방안을 협의할 예정임. 스기야마 국장은 앞서 29일에는 베이징을 방문,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북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에 관해 논의했음.
- 일본 정부는 지난 30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안전보장 회의를 열고 북한이 발사한 위성의 로켓이나 부품이 일본 영토에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요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음. 이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키리시마호가 북한의 로켓발사를 앞두고 동중국해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코스카항을 출발했고, 오키나와현 미야코섬에는 지대공 요격 미사일인 PAC-3도 배치됐음.
- 한중일 외무장관들도 오는 7~8일 이틀간 중국 저장(浙江)성 Ningbo(寧波)에서 만나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광명성 3호 문제 등 지역과 국제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임. 3국 외무장관회담은 오는 5월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북한의 로켓과 핵문제가 긴급 현안으로 대두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중국 및 북한 간 접촉도 활발해 지고 있다. 북한 외무성의 리근 북미국장은 1일 독일 베를린 인근에서 열리는 국제 세미나에 참석해 미국 측 전직 고위관리들과 비공식 접촉을 하고 있음. 미국 싱크탱크인 아스펜 연구소 독일 지부가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토머스 피커링 전 미 국무차관 등이 참석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리근 국장은 독일로 떠나기 전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메시지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호상(상호) 관심사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 중국 정부는 김일성 100번째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을 앞두고 리자오싱(李肇星) 전 외교부장을 4월초 평양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음. 중국은 리자오싱 전 부장 등 고위급 인사의



평양 파견이 이뤄질 경우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한 우려와 불편한 심기를 북한 측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나. 미·북 관계

● 오바마 "北 도발엔 보상없다"(종합)(3/26)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관계개선을 할 용의가 있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더이상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했음.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외국어대를 방문, 학생들을 상대로 행한 특강에서 "북한 지도층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미국은 북한에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으며 우리는 평화를 위해 헌신을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사가 있으며 그렇기때문에 지난 몇 년간 북한의 여성과 어린이에게 영양공급을 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도발과 핵무기를 계속 추구했지만, 이를 통해 북한이 추구하는 안보를 성취할 수 없었다. 오히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안보를 저해하고, 국제사회에서 더 심각한 고립에 빠지게했다"면서 "북한은 계속 이대로 갈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두 그 길의 끝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더이상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런 세상은 끝났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제 선택은 북한 앞에 놓여 있고, 그 선택은 북한이 해야한다. 북한 주민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며 북한 지도부의 태도변화를 강력히 촉구했음.
- 그는 이어 "분단된 한반도에서 모든 한국민들이 열망하는 그 날이 쉽게 오지는 않겠지만 그 날은 분명히 올 것"이라며 남북통일이 이뤄질 것임을 강조한뒤 "마침내 한국민들은 자유로운 하나가 될 것이며, 어떤 시련이든 우리는 함께 할 것이고, 같이 갈 것"이라며 확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은 권위주의에서 번성하는 민주주의로, 폐쇄적인 나라에서 안보와 번영의 리더로서 전세계에서 글로벌 코리아로 변화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방위에 관한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중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핵물질이 평화적 목적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라고 비판하고 "나는 외교적인 해결을 원하지만 시간이 얼마없다. 이란은 선택을 해야하고 그 의무를 다해야한다. 조약은 구속력을 가지며, 그 위반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경고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보유중인 핵물질을 통제하고 러시아와 함께 1만7천개의 핵무기를 1천개로 제한하는 등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이 완료된 후에는 미국, 러시아 양국이 가진 핵탄두 숫자는 1950년대 이후



- 최저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오는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략핵무기 감축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핵군축을 할 수 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전략 핵탄두 뿐 아니라 전술 핵무기 등도 감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와 관련, "핵테러의 위험은 세계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라며 "앞으로 핵테러를 막는 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테러리스트들의 핵 물질 취득을 원천 봉쇄할 것이며, 불법 핵물질 거래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년전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미국의 의지를 천명한바 있으며, 앞으로 이 목표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한뒤 "오사마 빈 라덴의 죽음으로 알 카에다 등 핵무기를 취득하려했던 조직들이 점점 약해지기는 했지만 앞으로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와 핵물질 제거를 위한 2년전의 약속을 이행하고, 더 구체적인 수치를 공약으로 내걸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음.

● <핵안보> 北 이틀째 오바마 대통령 실명비난(3/27)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문제 등을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북한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음. 북한은 핵안보정상회의가 개막한 26일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명하며 대미비난을 쏟아내고 있음. 미국과 고위급회담을 진행 중인 북한이 미 대통령을 실명비난하는 것은 이례적임.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7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미국 최고당국자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평화적 과학기술 위성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로 걸고 들었다"며 '미국 최고당국자란 표현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겨냥했음.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적대적 의사가 없다고 말은 하지만 고질적인 대결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적 위성발사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만 보이는 것"이라고 비난했음.
- 이어 "미국이 우리의 위성발사에 대해 이중기준을 적용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가에 따라 미국 최고당국자의 발언이 진심인가 위선인가를 판별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으려는 대결관념에서 벗어나 우리에게도 남들과 똑같이 위성발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음.
-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실명비난도 이틀째 이어졌음.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제 코나 씻으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오바마가 미국의 병집은 뒤로 감추고 우리 공화국이 어떻다는 식으로 아닌보살한(시치미를 떼고 모른 척한) 걸 보면 그도 어지간히 낮기죽이 두껍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음.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5일 방한 첫 일정으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자유와 번영의 견지에서 남과 북만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곳은 없다" "북이 변해야 하며 다른



것을 시도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비난강도를 높였음.

- 전날 우리민족끼리는 '오바마는 아예 일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논평에서 "오바마는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우리 인민의 100일 추모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바로 그 시각에 비무장지대에서 우리를 향해 도발적 폭언들을 마구 쏟아내고 우리 인민의 신성한 추모 열기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해 나섰다"며 "이것은 오바마의 머릿속에 가득 찬 극도의 반공화국 적대감의 발로인 동시에 우리의 100일 행사에 대한 무례한 도발로서 추호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맹비난했음.

● 美하원 외교위, 북한인권법 5년 연장(3/29)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 처리했음. 공화당 소속 일레나 로스-레티넨 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이 법안은 개회 5분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이에 따라 전체회의로 넘겨졌음.
-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10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8년에 4년 연장됐으며, 올해 다시 외교위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재연장안을 공동 발의했음. 법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에도 불구하고 북한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상태"라면서 "탈북자들의 상황도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음.
- 특히 법안은 최근 국제사회 이슈로 부각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도 언급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음. 법안은 "미국, 한국,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 북한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로스-레티넨 위원장은 "독재의 유산이 새 지도부에도 이어져 북한은 세계최악의 인권 학대 정권이 됐다"면서 "자국 주민들을 무참히 짓밟는 정권은 외국과의 합의를 지킨다고 신뢰할 수 없고, 따라서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게 북한 안보위협을 다루는 데 핵심요소"라고 말했음.

● 美, 北광명3호 발사대비 이동 레이더 배치(3/30)

- 미국이 다음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로켓 발사 계획에 대비해 첨단 이동식 레이더를 태평양 지역으로 파견했음. CNN 인터넷판은 미군이 첨단 이동식 레이더인 SBX(Sea Based X-Band Rader)-1을 지난 23일 하와이 진주만에서 출항시켰다고 30일 보도했음.
- 미군이 출항시킨 SBX-1 레이더는 바다에 뜨는 구조물에 설치돼 있고, 목표물을 찾거나 추적할 수 있으며 알래스카 기지와 캘리포니아 공군기지의 요격 미사일과 교신할 수 있음. 다만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남쪽으로 쏘아올릴 계획이어서 미국이 요격 미사일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지는 미지수임. 익명을 요구한 미군 관리는 이 첨단 레이더 배치가 북한 광명성 3호 발사계획에 대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



은 채 "예방적 조치"라고만 말했다.

- SBX-1은 목표물에서 수백마일 떨어진 지점에서도 작전이 가능해 북한 근해까지 접근하지 않아도 됨. SBX-1은 가로 73미터, 세로 118미터, 높이 83미터이며 승무원이 86명임.
- 미군 관리들은 북한 미사일의 정확도가 낮아 파편이 북한이 밝힌대로 해상에 떨어지지 않고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음.

● 美태평양사령관 "北상황, 긴급 안보현안"(종합)(3/30)

-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군 사령관은 29일(현지시간) "최근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 북한 상황은 '가장 긴급한(most pressing)' 안보 현안이 됐다"고 말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 예산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 등에 언급,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추진하려는 여러 형태의 도발로부터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 라클리어 사령관은 또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러시아, 중국, 인도 등 핵보유국과 북한의 핵 야욕, 역내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등을 미 태평양군 사령부 관할 지역의 안보 도전과제들로 지목했음.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제임스 D.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와 관련, "과거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같은 정책 패턴을 따르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평가했음.
- 서먼 사령관은 특히 "김정은의 옷차림새 등을 보면 조부(김일성 주석)를 모델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북한은 앞으로 주변지역은 물론 미국 본토에도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주한미군 기지 이전 계획과 관련, "한국의 차기 정권을 어느 쪽에서 잡든 (전력) 재배치를 통한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먼 사령관은 청문회에 앞서 연합뉴스 기자에게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 뒤 "오는 31일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먼 사령관은 전날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방부에 주한미군 공군력 증강을 요청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음.
- 의회 녹취록에 따르면 그는 주한미군 전력과 관련한 롭 위트먼(공화. 버지니아) 의원의 질문에 "현재 주한미군에는 완전한 형태의 전투비행단(Combat Aviation Brigade)이 없다"면서 "국방부와 육군부, 태평양군 사령부 등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위해 한국에서 빼냈던 군사력을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국이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을 위해 주한미군에서 차출한 아파치헬기 대대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美 "재미한인-北이산가족 상봉 계속 추진"(3/30)

- 미국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 재미 한국인의 북한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이와 별개로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북한 로켓발사와 재미 한국인 이산가족 상봉 사업의 연관성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이는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 국무부는 "미국적십자사(ARC)는 인도주의 사업의 일환으로 전세계 이산가족 상봉을 돕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전 이후 한국계 미국인들의 북한내 가족 재회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 정부가 북한의 로켓발사 계획 발표 직후 대북 식량(영양)지원과 북한내 미군 유해 발굴작업 등 인도주의적 사업을 모두 중단기로 결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입장으로,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됨.
- 이와 관련,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미국내 이산가족 관련단체 대표들과 만나 북한내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교환 등을 위해 미국적십자사에 등록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킹 특사는 지난 27일 워싱턴DC 이산가족재단의 알리사 우 대표, 로스앤젤레스(LA) 이산가족협의회 의회 씨니 조 회장, 미국 한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의 이차희 사무총장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조언했으며, 이들 대표는 즉시 미국적십자사와 관련 절차를 협의했다.
- 워싱턴DC 이산가족재단 관계자는 "킹 특사와 과거 여러차례 면담했으나 북한내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구체적인 권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에 따라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미국적십자사 등록 신청서를 발송하는 등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美 "로켓발사時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종합)(3/30)

- 제임스 밀러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 "강행한다면 향후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밀러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존 매케인(공화. 애리조나) 상원의원의 대북 식량(영양)지원 관련 질의에 "로켓 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런 지원과 앞으로 취할 예정이었던 다른 (대북) 조치들을 중단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한다면 식량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매케인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내 생각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매케인 의원이 대북 식량지원의 규모에 대해 "240t, 2억달러 상당의 물량이 맞느냐"고 묻자 "정확하다"고 말했다.
- 이같은 언급은 피터 라보이 국방부 이태담당 차관보 대행이 전날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에 따라 대북 영양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힌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미 정부가 향후 단호한 대북정책



- 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됨.
- 이와 함께 밀러 지명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은 물론 미국에도 '직접적 위협(direct threat)'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따라서 북한을 면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북한체제의 불투명성과 최근 불명확한 권력승계 과정 등은 우리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0년 한국을 겨냥한 두차례 군사공격은 그들의 도발 의도를 가감없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 그는 또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적절한 상황이 되면 북한과의 직접외교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밀러 지명자는 한국과의 안보협력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략에서 중요한 주춧돌 가운데 하나"라면서 "전례없이 강력한 관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밖에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주한미군 기지 이전, 가족 동반 근무도입 등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며 "공식 임명되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밀러 지명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후 국방부 수석 부차관으로서 국방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해 왔고, 그 전에는 그의 전임자인 미첼 플루노이 정책차관과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공동 설립한 싱크탱크 신국가안보센터(CNAS)의 선임 부회장으로 재직했다. 밀러 지명자가 이날 인준 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되면 미 국방부의 한반도 정책 라인인 밀러 차관-마크 리퍼트 아태담당 차관보 내정자-마이클 쉬퍼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으로 짜여지게 될.
- **北 "美 식량지원 중단은 2·29 조미합의 위반"(3/31)**
- 북한 외무성이 대북 식량지원 중단을 선언한 미국을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인도주의적 문제는 정치와 연관시키지 않는다고 표방하던 미국이 우리의 위성(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해 식량지원 공약의 이행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며 "이것은 2·29 조미합의의 핵심사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조미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는 유감 천만 한 행위로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의 위성 발사를 한사코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몰아붙이려는 데는 나름대로 추구하고 있는 정치군사적 목적이 있다"며 "미국은 우리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이 '미국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떠들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모든 나라가 다 반대하는 저들의 미사일 방위체계 수립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써먹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이제라도 주권국가의 평화적 위성 발사를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며 그를 통해 적대의사가 없다고 한 말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 일·북 관계

● 日총리 "北 미사일 발사 평화·안정 해쳐"(3/26)

-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음. 노다 총리는 현 상태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신설이나 증설은 곤란하며, 핵 안전보장 강화를 위해 인접국인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다 총리는 26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맞아 도쿄에 주재하는 한국 특파원단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음.
- 그는 북한이 예고한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 "인공위성이라고 부르는 미사일 발사는 분명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음. 그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유감이며, 제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발사 중단을 촉구했음. 노다 총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관련 "핵안보를 강화하려면 관계국이 모두 밀접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인접국인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일본의 원전 정책에 대해 "현 상태에서는 원전의 신·증설이 곤란하다"면서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진척 상황이 다양한 만큼 지역주민의 의견을 고려하면서 사안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그는 원전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한·중·일 협력에 대해 "작년 5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정보의 공유와 협의 촉진을 통해 3국 간 협력을 추진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 "실무 레벨에서 긴급 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음.
- 노다 총리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의 교훈과 관련 "원자로의 비상용 전원이나 펌프를 쓰나미로 수몰될만한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핵연료(노심) 손상이라는 심각한 사고를 상정해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반성했음. 그는 또 "원전 규제 당국은 평상시 법령에 근거해 원전사업자를 확실하게 감독해야 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도 일정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日 방위상, 자위대에 北로켓 요격 준비 지시(3/27)

- 다나가 나오키(田中直紀) 일본 방위상은 4월 중순 발사될 북한 로켓이 일본 영토에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 요격용 미사일을 배치하도록 27일 자위대에 지시했음. 방위청 관리들은 이 지시에 따라 자위대가 지대공 패트리어트-3 미사일과 함대공 스탠더드 미사일-3를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 배치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음.
-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30일 열리는 안전보장회의 이후 다나가 방위상이 일본 영토나 영해에 떨어지는 북한 로켓 요격 명령을 자위대에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음. 앞서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



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일본 정부가 내렸다고 밝혔음.

- 다나카 방위상도 하루 전인 26일 참의원에 출석해 "우리는 전례에 따라 도쿄 일원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음.

● 日, 대북 제재 연장 방침(3/28)

-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3일 만료되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1년 연장하기로 했음. 28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현안의 해결을 위한 북한의 구체적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음.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 현안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어 기존 제재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의미임.
- 일본 정부가 제재 연장 방침을 밝힌 것은 북한이 예고한 다음 달의 위성 발사를 견제하려는 뜻도 있는 것으로 보임. 일본은 2006년 7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이후 만경봉호의 입항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고, 이후 북한 국적자의 입국 금지, 수출입 전면 금지 등으로 제재의 강도를 높여왔음.
- 일본은 다음 달 북한이 미사일 실험으로 보이는 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추가 제재도 검토하기로 했음.

● 北 "일본 북한인권 부각은 과거청산 회피 의도"(3/28)

- 북한은 28일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 '북 인권 탄압 개탄' 결의안을 상정한 일본을 강하게 비난했음.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너절하고 고약한 행위'란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납치문제를 구실로 우리의 인권문제를 의도적으로 부각하려는 데는 조일 관계의 기본이 마치 납치문제인 것처럼 왜곡해 과거청산을 교묘하게 회피하려는 어리석은 기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 논평은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저들이 심각한 인권문제들은 무시하고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운운한 것은 언어도단이며 선택성, 이중기준의 극치"라며 "기관은 정치 난쟁이 일본이 해마다 반공화국 결의 채택의 고정 돌격대로 나서서 악랄하게 책동하는 것"이라고 일본을 비난했음. 논평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조선인 강제 연행과 위안부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일본의 인권 타령은 저들의 불미한 과거와 현재의 인권유린행위를 가리기 위한 연막"이라고 주장했다.
- 앞서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25일 "북한의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 탄압을 개탄한다"는 내용으로 일본이 상정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음.

● "北 핵·미사일 개발 문제 점점 심각한 상태"(3/30)

-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점점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일본과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 역시 증대하고 있다고 일본 방위성이 30일 경고했음. 또 북한은 서방 측이 탄도 미사일로 의심하는 장거리 로켓(광



명성 3호)의 발사에 대해 중국이 궁극적으로 지지할 것을 확신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NIDS)가 펴낸 '2012년 동아시아 전략개관'이 지적했음.

- 방위연구소는 243쪽의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작업이 진전돼 탄도 미사일 적재가 가능해지고, 탄도 미사일 사정거리도 늘어난다면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음. 보고서 발간을 주관한 아키히로 히로야수 교수는 김정은의 북한 체제는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취소하라는 국제적인 요구와 미국의 식량 지원 중단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발사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했음.
- 그는 보고서 발간과 관련한 기자 회견에서 "북한은 국제적 압력 속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더라도 중국이 궁극적으로는 이를 지지할 것으로 확신하는 것 같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최대 지원국인 중국에 대해 북한 자제 요청을 했지만, 북한 측은 무반응 상태라고 밝혔음. 북한은 이번 발사가 평화적 목적을 위한 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을 위시한 미국의 우방은 이번 발사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억제를 위한 유엔 제재안 위반이라는 입장임.
- 보고서는 이어 김정은이 권력 기반 강화와 국제사회의 이목을 이끌려는 방안의 하나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같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음. 가타하라 에이치 방위연구소장도 일본 외신기자클럽에서의 29일 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 문제를 다루면서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동맹 및 중국을 포함한 관련국과의 외교 노력 강화와 함께 자체적인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남중국해 상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과 관련해 보고서는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동아시아권 국가들 사이에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필리핀은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확대하고 베트남도 조심스럽게 미국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 日방위상, 자위대에 北위성 파괴명령(종합)(3/30)

- 일본 방위상이 북한이 발사할 위성에 대해 필요할 경우 요격하도록 자위대에 명령했음. 일본 정부는 30일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이 발사한 위성의 로켓이나 부품이 일본 영토에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요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음.
- 다니카 나오키(田中直紀) 방위상은 이 결정에 따라 자위대에 북한의 위성에 대한 '파괴조치명령'을 발령했음. 일본 방위상의 파괴조치명령은 2009년 4월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어 두 번째임. 당시엔 탄도미사일의 본체나 부품이 일본 영토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요격은 실행되지 않았음.
- 북한은 다음 달 12~16일의 오전 중에 미사일 실험으로 보이는 위성 발사를 예고해 놓고 있음. 이 위성의 1단 로켓은 한국의 서해, 2단 로켓은



오키나와 부근 상공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

- 방위성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비해 오키나와(沖縄) 주변의 동중국해와 서태평양, 한국의 동해 등에 이지스함 3척을, 육상에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했음. 패트리엇 미사일은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3곳과 오키나와(沖縄) 본섬, 미야코(宮古), 이시가키(石垣) 등 섬에 배치할 방침임. 또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이 북한이 발사한 위성을 레이더로 추적하는 동안 함정 주변의 경계 감시를 위해 F15 전투기를 투입하기로 했음.

라. 기 타

● 北 "유엔 북한인권 결의 단호히 배격"(3/26)

- 북한은 최근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를 전면 배격했음.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은 26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적대세력들은 유엔인권이사회 제19차 회의에서 해마다 벌어는 상투적인 반공화국 '결의' 채택놀음을 되풀이했다"며 "적대세력들의 역겨운 광대놀음의 산물인 반공화국 결의를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음.
- 대변인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해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를 어찌보려는 시도는 가소로운 망상"이라며 "우리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과 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우리 인민이 선택한 자주 의 길, 선군의 길을 따라 오직 곧바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음.
- UNHRC는 지난 22일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국가정책에 의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고 북한에 유엔 인권보고관의 접근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음.

● 李대통령 이틀째 양자회담..중-러 '北로켓' 경고(3/26)

-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외교적 해법 모색에 나섰음. 이 대통령은 전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이날 중-러까지 한반도 주변 3개국과의 회담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여론조성에 주력했음.
- 후 주석은 회담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과 여러 차례 소통하면서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포기하고 민생발전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음.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두 정상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한반도 평화와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중국 측은 한국과 소통하면서 한반도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말했다.

-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미사일 발사"라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정세에 불안을 가져오는 바람직하지 못한 계획"이라고 지적했음. 그는 이어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이전에 북한 주민을 먼저 먹여 살려야 한다"면서 "언제까지나 북한이 국제사회 원조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없다. 북한도 변해야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고 밝혔음.
-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자신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며 고립을 심화하고 인접국과의 관계를 손상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지난달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대북 식량지원 패키지는 (제공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한국외대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관계개선을 할 용의가 있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더이상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거듭 촉구했음.
-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말로 북한을 위한다면 국제사회에 개방하고 국제사회와 북한이 협력하게 해서 중국·베트남과 같은 모델을 따르게 해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도 내심 미사일 발사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처럼 6자회담 당사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한목소리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반대하는 '4각 공조'를 이룸에 따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음.
- 한편, 이 대통령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모하메드 빈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왕세자외도 각각 정상회담을 열었음. 누르술탄 카자흐 대통령과는 양국 간 인프라·건설 등 주요 경제협력을, 피네라 대통령과는 신재생에너지·환경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음. 또 에르도안 터키 총리와 모하메드 UAE 왕세자와는 각각 원자력발전소 건설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했음.

● 北, 작년 대 EU 교역서 최대흑자(3/27)

- 북한이 지난해 유럽연합(EU)과 교역에서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했음.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1년 대북교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對)EU 수출은 1억2천180만 유로로 2010년(9천900만 유로)보다 23.3% 늘어난 반면 수입은 전년도(6천800만 유로)보다 40.3% 줄어든 4천60만 유로에 그쳐 8천120만 유로의 흑자를 기록했다.
- 지난해 북한의 흑자 규모는 종전 사상 최대였던 2010년의 3천100만 유로의 2.6배를 넘는 것임. 지난해 북한과 EU의 전체 교역액은 1억6천240만 유로로 2010년(1억6천600만 유로)보다 3% 감소했음. 북한의 수출품 가운데 석유와 광물이 7천100만 유로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



- 고, 의류 2천300만 유로, 기계류와 수송장비가 1천만 유로였음. 북한이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기계류와 수송장비로 1천400만 유로이며, 기타 제조업 제품 1천100만 유로, 농산품이 700만 유로 등이었음.
- 한편 지난해 한국과 EU 간 교역액은 684억 유로로 북-EU 교역액의 421배에 달했음.

● <핵안보> 潘총장, 공식회의서 北로켓 문제 제기(3/27)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7일 북한의 '광명성 3호' 로켓 발사와 관련,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음. 반 총장은 이날 정상회의의 오후 세션 발언을 통해 "최근 여러차례 말해왔듯이 북한이 다음달 이른바 실용 위성(application satellite)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어떤 탄도 미사일 기술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음.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기간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등 많은 정상들이 장외 양자회담에서 북한측에 이를 경고하면서 발사 중지를 촉구한 적은 있지만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반 총장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 총장은 핵 프로그램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과 이란에 대해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재차 촉구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언급했음. 그는 양국에 대해 "파괴적인 방법을 피해 평화적으로 국제 사회의 우려에 대처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음.
- 앞서 반 총장은 24일 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 발표는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음. 또 22일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을 때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 때문에 이번 그의 언급은 자신의 약속을 지킨 것으로 회의장 안팎에서는 평가했음.
- 핵테러 방지를 위한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비확산 문제 등 개별 국가의 문제는 논의 주제가 아님. 반 총장은 이에 따라 핵안보 강화를 위한 유엔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조연설 말미에 북한 로켓 문제를 곁들이는 형식을 취했음.

● <李대통령 '후진타오 北 비판 발언' 재확인>(3/27)

-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장 회견에서 전날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을 이례적으로 비판했던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을 재확인해 눈길을 끌었음.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중국의 대표계서도 '북한은 주민들의 민생을 오히려 챙겨야지 많은 수억 달러의 돈을 쓰면서 그렇게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을 해줬다"고 전했다.
- 이 대통령의 전언이 주목받는 것은 전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후 주석의 대북 비판 발언을 정작 중국 외교부나 언론에선 소개하지 않았기 때문임. 전날 회담에서 후 주석은 '위성 발사 계획을 포기하고 민생 발



전에 집중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았음. 이런 점에서 후 주석의 대북 비판을 재확인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의도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옴.

- 세계인의 이목이 쏠린 핵안보회의 회견을 통해 후 주석의 대북 비판 발언을 다시 한번 부각하려 한 게 아니냐는 얘기임.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이 중국 관영 CCTV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도 예사롭지 않은 대목임. 이 대통령은 또 핵안보정상회의 본회의에서도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를 지적한 정상들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도 소개했음.
- 이 대통령은 회견 모두발언에서 이날 폐막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핵 테러 없는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새로운 이정표"라고 평가했음. 또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결집한 정치적 의지와 비전을 현실로 옮기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자평했음.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행사에 따른 여러 불편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국민과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음.

● 北 '발사계획 취소' 요구 潘총장 실명비난(3/28)

- 북한이 28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장거리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 발사계획을 유엔결의 위반이라며 철회를 요구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실명비난했음.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엔사무총장 반기문이 우리의 '광명성 3호' 발사문제를 놓고 국제기구 수장의 격에 맞지 않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며 "동족으로서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환영하고 좋게 보지는 못할망정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동조하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유엔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처사"라고 비난했음.
- 북한은 그동안 남한 출신인 반 총장의 실명을 언급하는 일은 되도록 꺼려왔음. 논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는 주권국가인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위성발사 권리를 부정한 미국과 그에 추종한 이사회의 불법무도한 강권행위에 의해 산생된 추악한 음모의 산물"이라며 "유엔이 우리의 위성발사를 문제시하고 '결의'를 채택한 것은 명백히 우주의 개발과 이용에서의 이중기준"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유엔 사무총장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어느 일방의 주장에 추종해 편견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입장에서 서서 사실 여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우리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반 총장은 전날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안보 강화를 위한 유엔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조연설 말미에 북한 '광명성 3호' 발사문제를 언급하며 발사계획 중지를 촉구했음.



● **日언론 "핵안보회의의 北 미사일이 큰 비중"(3/28)**

- 일본 언론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각국의 공동보조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평가했음.
- 요미우리신문은 28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의 개별 회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핵안보정상회의를 무대로 한 정상 간 회담은 미사일 발사 저지를 위한 각국의 공동보조 분위기를 만들어 '북한 포위망'의 환경 조성으로 연결됐다고 평가했음.
- 아사히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자평했지만, 북한 문제와 원전의 관리 문제 등 핵의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음. 이 신문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해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을 포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으며, 이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북한에 위성 발사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발언을 끌어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할 징후가 없다고 전했다.
-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대부분의 참가국이 이 대통령의 '북한 미사일 발사 저지' 호소에 동조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국제사회 대응에 한계가 노정됐다고 보도했음.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미사일 발사 포기 압력이 '북한에 심리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북한이 이를 실감하도록 하려면 관계국들이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포위망을 좁혀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산케이신문은 한국이 미국과 공조해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판을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선언 채택 등의 방법으로 참가국 모두가 북한에 미사일 발사를 단념토록 압력을 가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미군 성폭력 예방에 한·미 양국 협력 확대키로(3/29)**

- 미군 성폭력 예방교육에 한·미 양국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음. 여성가족부와 외교통상부는 29일 주한미군과 공동으로 개최한 '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한·미간 협의회'에서 미군이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한국 전문가들이 자문하는 방안에 대해 미군 측이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향후 우리 정부는 미군 측 교육교재 보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임. 또 미군이 요청하면 강사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예정임.



- 이와 더불어 양국은 외교부, 여성부, 주한미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상시 협의체를 만들어 성폭력 예방교육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음. 이에 따라 한미 양측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전문가 간 협의 결과를 점검해 나갈 예정임. 정부 관계자는 "양국이 성폭력은 국적을 막론하고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는 데 공감했고 성폭력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나. 한·중 관계

● 한-중, '北로켓' 깊은 우려..중지 노력(종합)(3/26)

-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를 중지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음. 두 정상은 또 양국 간 현안이 되고 있는 이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음.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후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탈북자 문제는 인도주의적인 원칙에 따라 긴밀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전했다.
- 후 주석의 방한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방중에 이어 2개월만에 이뤄진 것임. 특히 후 주석은 회담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북한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중지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김 기획관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로 보고 중국과 협의한 한반도 평화·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두 정상은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양국 간 입장을 상호 이해·배려하는 가운데 긴밀한 협의 아래 원만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음. 후 주석은 국내법과 국제법 기준, 국제사회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의 우려와 관심을 배려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이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두 정상은 또 실무 준비를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공식 협상 개시를 조속한 시일내 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두 정상은 이와 함께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경제교역 투자는 물론 양국 관계의 급속한 관계발전이 이뤄지고, 수교 20년간 양자 관계의 발전속도나 깊이가 깊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음. 이어 올해 여수 엑스포가 열리고 한-중 20주년 상호 방문의 해를 맞이해 양국 국민 간 인적 교류를 확대키로 했음.
- 두 정상은 중국 불법어로, 이어도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양국 간 언론 관계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음. 이 대통령은 "양국 언론환경이 다소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현안이 생겼을 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오해나 편견이 없도록 신뢰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고위급 비공개, 정기 전략 대화를 계속 강화해 한반도 미래와 남북관계에 대한 솔직하고 심도있는 대화를 계속해나가기로 했음.

● <韓中정상 '北로켓 저지' 긴밀 공조>(종합)(3/26)

- 한국과 중국 정부가 북한 문제를 놓고 실로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음.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이 한반도 평화와 6자 회담 재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하고 발사 저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음. 북한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추진 중인 민감한 시점에 한중 양국이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긴밀히 공조한다는 합의를 내놓은 것임.
- 특히 중국 지도부는 '혈맹인 북한에 대해 여러 차례 깊은 우려를 전달하면서 위성 발사를 포기하고 민생 경제 발전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는 사실도 알려왔음. 이는 과거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때와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임. 우리 정부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당시 중국 정부에 대해 대국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압박했지만, 중국은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견지한 전례가 있음.
-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예전부터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서 만큼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온 데서 연유함. 북한 핵개발을 막기 위한 6자 회담 참여 국가로서 국제사회 전체가 반대하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두둔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없기 때문임. 이런 점에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후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 중국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약간 진전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중국 지도부는 이날 국내법, 국제법,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의 우려와 관심을 배려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음. 물론 두 정상간 합의 사항에 '한국도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대목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원론적 수사'의 반복일 뿐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음. 그러나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만큼 중국 정부의 '원칙일변도' 조치에 앞으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됨.
- 양국 간 외교 현안인 이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을 조속히 추진키로 한 것도 의미가 없지 않음. 다만 이는 이어도 문제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당장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 장거리 로켓 문제나 탈북자 문제 등 더욱 시급한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도 나옴.

● 한-중 정상, 'EEZ 경계획정 협상' 조속 추진(3/26)

-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양국 간 외교 현안인 이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음.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핵안보 정상회의의 참석차 방한한 후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탈북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후 주석의 방한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방중에 이어 2개월만에 이뤄진 것임. 특히 두 정상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음.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올해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음.

●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中 언론인 방한(3/29)

-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동방위성TV, 인민일보, 광명일보 등 중국 주요 매체 언론인들이 한국을 방문함.
-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취재단은 9개 매체 16명 규모. 이들은 4월 1일부터 7일까지 인천 차이나타운, 새만금 사업 현장, 남대문 시장 등을 찾아 한중관계를 살펴보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계획임. 이들은 2일 한중 수교의 주역으로 활동한 윤해중 아시아문화발전센터 이사장을 만나 뒷이야기를 듣고 한중 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임. 3일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개막식에 참석함.
- 해외문화홍보원 우진영 원장은 "올해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이해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고자 중국 언론인 초청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다. 한·일 관계

● 日, 교과서·외교청서 또 독도 도발(종합)(3/26)

- 일본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임. 26일 일본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27일 오후 3시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함. 이번 교과서 검정은 영토 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 2008년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2009년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따라 내년 봄부터 사용될 고교 교과서에 대한 첫 검정이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문부과학성은 2009년 12월 발표한 고교 교과서 해설서에서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해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히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근거해 적확하게 취급, 영토문제에 대해 이해를 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음. 이는 2008년 7월 발표한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서 독도가 자국영토이며 "북방영토(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중인 쿠릴열도)와 마



찬가지"라고 한 입장을 고수한 것임. 이번 고교 교과서 검정은 일본의 전체 고교 사회과 교과서 103종 중 지리 7종, 일본사 6종, 세계사 13종, 현대사회 12종, 정치경제 1종 등 39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일본 외무성은 다음 달 6일 2012년도 외교청서를 발표함.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일본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할 것으로 전망됨. 외교청서는 일본의 외교활동과 방향을 담은 연차보고서임. 일본은 작년 외교 청서에서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했었음.

● **日총리 "위안부 日軍 성노예 표현, 사실과 괴리돼"(3/27)**

-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평화비'의 내용이 사실과 큰 괴리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됨. 27일 산케이신문에 의하면 노다 총리는 26일 참의원 예신위원회에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비(위안부 소녀상)'에 쓰인 '일본군 성적 노예 문제'라는 표현과 관련 "정확하게 기술된 것이냐 하면 크게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위안부가 일본군의 성적 노예라는 기술은 사실과 크게 다른 것이며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됨. 자민당의 아마타니 에리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음.
- 노다 총리는 작년 12월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위안부 평화비의 조기 철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마타니 의원은 미국 뉴저지주의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드파크시의 위안부 추모비도 문제 삼았음. 그는 이 추모비에 "1930년대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제국주의 정부 군대에 유린된 20여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을 기린다"고 기술한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음. 이에 대해 노다 총리는 "(추모비에 기술된) 수치와 경위가 근거가 없지 않느냐"고 불쾌감을 표시했음.
-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은 "팰리세이드파크 주민의 3분의 1이 한국계로 미국에서 가장 많다. 계속 주시하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겐바 외무상은 그러나 위안부와 관련 일본 정부의 관여를 최초로 인정한 지난 1993년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를 답습하겠다는 면서 "증거는 나오지 않았으나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 **<日 교과서 독도 도발...韓日외교 경색 심화>(3/27)**

-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경색된 한국과 일본의 외교관계가 교과서 문제로 더욱 냉각됐음. 일본 문부과학성은 27일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입은 교과서의 검정이 거듭할수록 그 도를 더하고 있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교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기술한 교과서가 증가하고 있음.
- ◇ 해마다 독도 영유권 강화 = 일본의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눈길이 쏠린 이유는 2009년 고교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



- 한 이후 첫 검정이라는 점 때문임.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二) 내각 당시인 2006년 애국심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했음. 1947년 제정 이후 59년 만의 첫 개정이었음. 2008년과 2009년에는 개정된 법률에 근거해 초·중·고교의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를 잇달아 내놓았음.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집필하는 지침이 바로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임.
- 2008년 7월14일에 발표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선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둘러싸고 (한일간에)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이해를 심화시키라'고 요구했음. 2009년 12월에 내놓은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바탕으로 일본의 입장에 기초해 영토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라'는 문구를 넣었음. 실제로 나온 교과서도 일본 정부의 가이드 라인을 충실히 따른 것이었음.
 - 2010년에 공개된 초등학교 새 교과서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지도 표기 등을 통해 강화했음. 작년 3월 말에 나온 중학교 새 교과서도 모든 지리·공민(일반사회)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았음. 이처럼 영토 주장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는 교과서는 점점 사라졌음. 중학교 교과서 중 유일하게 '중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출판사는 2010년 검정 신청에서 빠졌음. 대신 역사 왜곡을 주도한 새역모 계열의 이쿠호샤(育鵬社) 교과서는 2011년도 점유율이 3.7%(역사)와 4%(공민)로 늘었음. 각각 2010년도의 6.6배와 11.6배에 이룸. 교육기본법과 학습지도요령 개정의 효과가 여실히 나타난 셈임.
 - 이번 검정을 통과한 고교 새 교과서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했음. 위안부 관련 기술은 역사교과서 19종 중 12종에 그대로 실렸지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교과서는 39종 중 18종에서 21종으로 늘어났음. 고교 교과서 중에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메이세이사(明成社) 교과서의 채택률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임. 이번에 검정을 신청한 교과서는 일본의 고교 사회과 교과서 103종 중 39종에 불과하고, 나머지 검정 결과는 내년과 내후년에 잇따라 발표될 예정임.
 - 일본은 교과서 뿐만 아니라 내달 6일에 발표할 2012년도 외교청서에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기술을 담아 한국을 자극하고, 내달 11일에는 도쿄 한복판에서 처음으로 독도 반환 요구 집회를 열.
 - ◇ 외교 경색 심화 =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잔뜩 경색된 한일 외교 관계는 이번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임. 우리 정부는 일본 고교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강화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음. 학생들에 대한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해가 갈수록 집요하게 강화하고 있기 때문임.
 -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12월 교토에서 열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식 제기한 이후 지난 3.1절 기념식에서도 "위안부 문제만큼은 여러 현안 중에서도 조속히 마무



리해야 할 인도적 문제"라며 결단을 촉구했지만, 일본은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 이런 가운데 노다 총리의 지난 26일 위안부 관련 참의원 발언이 한국 내 여론을 악화시켰음. 노다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비(위안부 소녀상)'에 쓰인 '일본군의 성적 노예'라는 표현에 대해 "크게 괴리가 있다"고 말했음. 위안부가 일본군의 성적 노예라는 기술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임. 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정임. 노다 총리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지혜를 내겠다"고 말했지만 진정성이 의심을 받고 있음.
- 한일 외교는 독도와 위안부 문제 외에도 동해 표기, 강제 징용 보상 문제 등 곳곳이 지뢰밭임. 갈등과 대치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을 보임.

● 외교부 "日 독도 영유권 주장 용납않겠다"(3/27)

- 우리 정부가 일본 고교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에 강력히 반발했음.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27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된 직후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그릇된 역사관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밝혔음.
- 조 대변인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시하며, 우리 영토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 드러난 왜곡된 역사관의 최대 피해자는 일본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말했음. 그는 "그간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한일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누차 표명해 왔다"면서 "그런 의지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음.
- 외교부는 또 조세영 동북아시아국장이 이날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나온 직후 주한 일본대사관의 구라이 다카시(倉井高志)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밝혔음. 조 국장은 이 자리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구상서를 전달했음. 조 국장은 "일본의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는 그릇된 역사의 미화를 통해 바람직한 양국관계 정립을 저해할 뿐 아니라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에 도전하려는 처사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정부, 日교과서 검정 맞서 독도 홍보 강화(3/27)

- 정부는 일본의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되자 별도로 독도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관련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



음. 외교통상부는 27일 오후 10시께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지리적·역사적·법적 근거를 설명해주는 '독도 홈페이지(<http://dokdo.mofat.go.kr>)'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던 '독도' 배너와는 별개임. 새로 만든 홈페이지에는 독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과 우리 측 근거를 담는 한편 15가지 문항의 독도 일문일답, 독도에 대한 기본 정보 등을 담았음.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실린 10가지 문항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 질의응답을 통해 일본 측의 왜곡된 주장이 제3국으로 퍼졌다는 점을 의식해 독도 일문일답은 한국어와 일본어, 영어로 만들어 홈페이지 첫 화면에 올렸음. 스마트폰 사용이 늘었다는 점을 고려해 독도 애플리케이션도 만들었음. 안드로이드폰 애플리케이션은 한글로 '독도'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설치할 수 있음.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은 내달 초에 공개됨.
- 독도 팸플릿도 최근에 공개된 일본 측 사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강해서 한국어, 일본어, 영어, 독일어판을 새로 3만부 만들었음. 유복근 외교부 영토해양과장은 "앞으로 10개국어로 3가지 종류의 팸플릿을 2만부 더 만들어서 국내외 관계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日관방 "교과서 검정 한국 항의 수용불가"(3/28)

- 일본 정부가 새 고교 교과서에서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데 대한 한국의 항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항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일본 문부과학성이 새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항의하며 시정을 촉구한 데 대한 반응임.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것임.
- 외교통상부는 27일 일본 문부성의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된 직후 대변인 성명에서 "검정을 통과한 고교 교과서에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하며, 우리 영토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日언론 "독도 영유권 교과서 명기 정착"(3/28)

- 일본 언론은 28일 고교 교과서 검정과 관련, 독도와 센카쿠 등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교과서에 정착돼 가고 있다고 평가했음. 교도통신은 "지리과목에서 7종 전부, 현대사회 과목에서 12종 가운데 대부분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 명칭은 댜오위다오)를 기술해 교과서에 명기하는 흐름이 정착됐다"고 보도했음.
- 산케이신문은 이번 교과서 검정에서 "영토 문제에 대해 지리 교과서는



7편 모두가 다케시마와 센카쿠를 다뤄 현행 교과서에 비해 취급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현대사회와 정치경제 과목의 경우 현행 판은 독도와 센카쿠를 31종 가운데 20종이 다뤄 비율이 70%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번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는 13종 중 10종이 독도를, 11종이 센카쿠를 기술해 70%가 넘었다"고 보도했음. 신문은 이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영토를 다루라고 명시돼 있지 않지만, 작년 일본과 중국의 센카쿠 충돌 사태의 영향으로 영토문제에 대한 취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이번 교과서 검정에서는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가 독도와 센카쿠, 쿠릴열도 문제에 대해 10건의 수정 의견을 내었으며, 이 가운데 9건이 독도와 센카쿠에 관한 것이었음. 대부분 중국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문제와 한국과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는 독도와 쿠릴열도를 동일하게 취급한 교과서에 대한 수정요구 의견이었음. 이는 센카쿠는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토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라는 것임.
- 마이니치신문은 문부과학성 신학습지도요령의 지리역사 해설서는 "북방 영토 등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는 입장에 근거해 적확하게 다뤄 이해를 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음. 이 신문은 "지리역사 해설서에는 '북방영토'만이 명시됐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지리 교과서가 독도와 센카쿠를 기술했다"고 전했다. 영토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읽고 교과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독도와 센카쿠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다는 것임.

● 日 삿포로市 의회,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3/30)

-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의 삿포로(札幌)시 의회가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국과 협의해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삿포로시에 의하면 시 의회는 지난 28일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토대로 위안부 문제와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에 대한 협의에 나서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음. 시 의회는 한일 청구권협정에는 양국 간 협정에 대한 해석상의 분쟁이 있을 때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하되, 어려울 경우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하게 돼 있는 만큼 "일본 정부는 협의에 응해야 할 조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국 정부가 작년 9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원폭 피해자 문제와 관련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이미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이 된 문제'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즉시 협의에 응하라는 것임. 한국 정부가 지난해 일본에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뒤 일본의 자치단체에서 호응하는 의견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삿포로시 의회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해왔음. 1992년 6월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정한 시책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해 일본 정부에 성의있는 대책



을 조속히 강구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했음. 2008년 11월에도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 피해자에 명예회복과 배상을 요구했음.

- 삿포로시 의회는 당시 의견서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사죄와 진상 규명을 하지 않고 교과서에서 관련 기술을 지우려고 하는 데 대해 세계 각국이 비판한다"고 지적했음. 또 "정부는 위안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내각회의 결정으로 사죄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을 만들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손해배상은 물론 학교 교육에서 위안부 문제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요구했음.

라. 한·러 관계

● 메드베데프 "北 미사일보다 주민 먹여살려야"(종합)(3/26)

- 한국과 러시아는 26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발표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고 즉각적인 중지를 촉구했음.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전했다.
- 특히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회답에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미사일 발사"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정세에 불안을 가져오는 바람직하지 못한 계획"이라고 말했음. 또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이전에 북한 주민을 먼저 먹여살려야 한다"면서 "언제까지나 북한이 국제사회 원조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없다. 북한도 변해야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고 밝혔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어 서울에 오기 전 북한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중지하라는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음. 이에 이 대통령은 "정말로 북한을 위한다면 국제사회에 개방하고 국제사회와 북한이 협력하게 해서 중국·베트남과 같은 모델을 따르게 해야 한다"고 화답했음.
- 두 정상은 또 지난해 12월 러시아의 국제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양국 간 통상·무역 등 경제협력을 심화시키는 한편, 방산 협력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음. 양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교역 200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러시아가 관심있는 인프라·과학기술·경제개발 등에 희망하고 있어 보다 많은 협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청와대측은 전했다.
- 한편,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이 대통령의 참석을 공식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음. 김 기획관은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블라디보스토크의 도시 재건, 시베리아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적극 진행되고 있어 한국 기업이 진출하면 상호 경제협력의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음.



● <한-러 정상 '北미사일 반대' 공감 재확인>(3/26)

-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저지해야 한다는 양측간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음. 26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서임.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나아가 북한이 주장하는 '광명성 3호 위성 추진체'를 '미사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미사일 발사 계획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역내 평화에 분명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경고했음. 그는 특히 북한 정부가 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력 증강보다 주민의 빈곤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지적에도 전적으로 동의했음.
- 사회주의 국가의 '정신적 지주'로 오랫동안 북한과 우호 관계를 이어온 러시아의 국가원수가 공식석상에서 이처럼 강도 높게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비판함에 따라 북한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낄 것으로 전망됨. 반면 이 대통령과 우리 정부 입장에서선 상당한 우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음. 러시아는 이미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 지도부에 대해 높은 수준의 우려와 발사 철회 요구를 여러 채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음.
- 한·러시아 양국 정상은 이날 각종 경제 협력 사업의 확대와 과학기술·방위산업 등의 교류·협력 증대에도 합의했음. 특히 극동 시베리아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블라디보스토크 재개발 사업과 각종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 문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음. 다만 관심을 끌었던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의 경우 계속 협의한다는 선에서 원론적인 의견 교환만 있었다는 후문임.
- 이 대통령은 또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장으로서 이번 회의에서 발표될 러시아의 핵물질 감축 수준을 포함한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음.

마. 미·중 관계

● <핵안보> 미중 정상, 北로켓발사 집중 논의(3/26)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서울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양자간 현안을 집중 논의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 벽두에 북한과 이란의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뒤 중국과 미국은 핵 비확산문제에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해 줄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음.
-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후 "중국은 북한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고 북한의 잠재적인 불안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 "하지만 중국이 북한 핵무기 보유를 원치않는다고



- 믿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중국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중국도 자신의 우려사항을 북한에 전달하는 방식이 과거와 달라야 하며 북한의 행동에 좀더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어 26일 후진타오 주석과의 회담에서 이같은 뜻을 전달했을 것으로 관측됨.
- 이에 대해 후진타오 주석이 북한의 로켓발사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을 밝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음. 다만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후 주석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방해하는 상황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해 주목됨. 후 주석은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며, 민감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어렵게 조성된 계기가 반전되는 상황을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모든 관계 당사국들이 냉정하게 자제를 해줄것을 당부했다고 신화 통신은 전했다.
 - 이에 따라 후 주석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주변 강대국들이 냉정하고 자제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을 개연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후 주석은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밝혔다.
 - 후 주석은 "최근에 한반도에 또 다른 새로운 상황이 나타났고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우리는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현재 한반도 정세가 아주 복잡하고 민감하다. 우리는 쉽지 않게 온 한반도 긴장완화 추세에 역전이 생기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홍레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후 주석은 이어 "중국은 계속해서 각 당사자와 함께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오바마 대통령과 후 주석은 또 이란핵문제와 유혈충돌이 계속되는 시리아 사태 등 국제적 현안과 중국 위안화 절상 문제 등 양자 현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 후진타오 "위안 대폭 절상해도 美문제 해결 못해"(3/27)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서울에서 회담하면서 "실사 중국이 위안화를 대폭 절상해도 미국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올린 웹사이트 성명에서 위안 환율이 미국의 무역 적자와 실업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중국의 견해를 후 주석이 거듭 밝혔다고 전했다.
 - 후 주석은 "(환율에 대한) 시장 역할 확대를 허용하고 환율 변동폭도 개선하며 환율이 합리적이며 안정된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고 성명은 덧붙였다. 그는 달러에 대한 위안 가치가 지난 2005년 달러 페그제 포기 후 30%가량 상승한 점을 오바마에게 상기시켰다고 성명은 지적했다.



- 중국은 지난달 최소한 198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월간 무역 적자를 기록했음. 윈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도 앞서 위안 환율 변동폭 확대를 약속했음.

바. 미·러 관계

● <핵안보>"美-러 北로켓발사 저지 신호 보낼 것"(3/26)

- 미국과 러시아가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6일 밝혔음.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에 앞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사람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로켓 발사를 자제하도록 신호를 보내기로 합의했다"며 "우리는 북한이 로켓 발사를 포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음. 오바마는 이어 이란 핵문제와 관련 이란과 '5+1 중재그룹(유엔안보리5개상임이사국+독일)'의 협상을 지지한다면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이란이 국제 의무를 이행하며, 핵무기가 아닌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에너지를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국 정상은 시리아 유혈 사태에 대해서는 유엔과 아랍연맹(AL)의 시리아 문제 공동특사 코피 아난 전(前) 유엔 총장의 중재 임무를 지지한다고 밝혔음. 메드베데프는 하루 전 모스크바에서 아난 특사와 면담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이것(아난 특사의 활동)이 시리아 내 여러 사회세력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길을 닦고 사태를 안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러시아와 미국은 아난 특사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도 시리아 사태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서로 다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아난 특사의 활동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미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의 유럽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구축 문제와 관련, 서로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음. 미국과 나토는 이란 등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유럽에 MD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러시아는 나토의 유럽 MD가 자국 핵전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메드베데프는 "우리의 입장은 예전과 마찬가지로이지만 이 주제와 관련한 대화는 가능할 뿐 아니라 필수적"이라며 "오바마와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준비과정에서 쌓은 좋은 경험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아직 합의를 통해 균형잡힌 해결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바마도 "지금쯤 우리의 기술 전문가들이 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야 할 시기"라면서 양국 전문가들이 협상을 통해 유럽 MD 문제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룰 가능성에 기대를 표시했음.



- 양국 정상은 최근 미-러 관계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 리셋(reset, 화해)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나는 최근 3년 동안 우리가 한 일이 절대적으로 유용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3년이 최근 10년간의 러-미 관계에서 가장 좋은 시기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이에 오바마도 "최근 3년은 실제로 아주 생산적이었다"고 화답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새 START 협정 체결을 꼽았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당선자의 이름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올 11월 대선 이후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답했음.

● 美 국무부 "주러 대사 안전에 우려"(3/31)

- 미국 정부가 30일(현지시간) 러시아 주재 자국 대사 마이클 맥폴의 안전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음.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맥폴 대사가 모스크바에 부임한 이후부터 그의 개인적 안전에 우려를 느낄만한 사건이 몇차례나 발생했다"면서 "외교 규정에 따라 우리는 이 문제를 러시아 정부에 제기했다"고 밝혔음.
- 토너 부대변인은 "29일에도 (친정부 성향의 현지) NTV 방송 기자들이 맥폴 대사가 인권운동가 레프 포노마료프를 만나기로 한 인권운동 단체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는 등 그가 NTV 기자들로부터 지나친 주목의 대상이 됐다"면서 "이에 대해 (러시아 당국에) 우려를 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그는 그러면서 "며칠 전에도 '반미주의적 사건들과 관련해 러시아 외무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 지난 1월 러시아로 부임한 맥폴 대사는 앞서 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NTV 기자 등으로부터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철저히 감시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털어냈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러시아·유라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러시아통인 맥폴은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NTV가 따라다닌다. 누가 내 일정표를 그들에게 전달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도대체 그런 짓을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이 이 나라에는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음.

사. 중·일 관계

● 日, 센카쿠 섬 한 곳 국유재산 등록(3/27)

- 일본 정부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 · 중국명 다오위다오) 주변의 섬 한 곳을 국유재산에 등록했음. 27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센카쿠 주변 4개 섬 가운데 기타코지마(北小島)를 국유재산대장에 등록했다고 밝혔음. 일본 정부는 센카쿠 주변 4개 무인도에 대해 이달 초 이름을



지은 데 이어 이번에 한 곳을 국유재산에 올렸음.

- 일본 정부는 센카쿠 주변 4개 섬 가운데 나머지 3개 섬은 일본의 민간인 소유로 돼 있어 국유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 일본은 작년 8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준이 되는 섬 23개를 국유화했으나, 센카쿠 주변 4개 섬에 대해서는 중국을 배려해 국유화 대상에서 제외했었음.

아. 중·러 관계

● "中-러, 4월말 서해서 합동해군훈련"(3/30)

-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다음달 22일부터 29일까지 서해 인근 해상에서 합동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이타르 타스 통신이 러시아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29일 보도했음.
- 이번 훈련은 양국 해군의 사령부 설치와 부대 전개, 20여 척의 함정과 항공기 배치와 대응 훈련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이 훈련은 지난해 천빙더(陳炳德)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합의된 것으로, 러시아에서는 태평양 함대 소속의 '바라그'급 대형 반잠수함을 기함으로 미사일 순양함과 구축함, 호위함, 보조선 등 10여 척을 파견할 예정임. 러시아 함정들은 대한해협을 거쳐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중국 해군과 합류하고 인근 해역에서 훈련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빌려 훈련 사실을 확인했음. 양국은 지난 2005년부터 상하이협력기구(SCO)의 합동 군사 훈련에 참가하고 있음.

자. 기 타

● <핵안보> 4강 정상 활발한 양자외교(3/26)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4강 정상들이 모두 참석했음. 4강 정상들은 26일 개막하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전후로 활발한 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등 국제정세는 물론 상대국과의 양자현안을 집중 조율하는 기회로 삼고 있음. 일단 4강 정상들은 대부분 서울 방문을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와 긴급 현안으로 대두된 북한의 로켓발사 문제를 집중 논의했거나 할 예정임. 이 대통령은 25일 오후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데 이어 26일에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도 한중, 한러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등을 집중 논의함.
-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외대 강연을 마치고, 베드베테프 러시아 대통령과 미리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와 시리아 사태 등 국제적 현안을 논의함. 특히 1년째 계속되는 시리아 유혈사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러시아에 유혈사태 종식을 위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오후에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를 저지하기 위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어서 후진타오 주석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이밖에 25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와 회담을 갖고 이란핵문제와 시리아 사태 등을 논의했고 26일에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도 양자회담을 갖고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한 공조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25일 저녁 부인 류용칭(劉永淸) 여사와 특별기편으로 입국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아프리카 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임. 후 주석이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배경에는 전통적으로 아프리카를 중시해온 중국의 외교정책을 과시하고, 28일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및 남아공 정상이 참여하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앞서 공조방안을 논의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됨.
-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경우 26일 이명박 대통령 및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에 이어 마리아노 라호이 브레이 스페인 총리 그리고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임. 중국과 러시아는 서울에서는 양자 정상회담 일정을 잡지 않고 있음. 다만 서울 회의에 이어 뉴델리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양국 정상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어서 자연스럽게 회동할 것으로 관측됨.
- 4강 정상중 제일 늦은 26일 저녁 서울에 도착하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총리만 현재까지 양자 정상회담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6일 이한 직전 이명박 대통령과의 실무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음.

● <핵안보>韓·美·日·英·佛 "운송 보안 강화"(3/27)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둘째 날인 27일 한국, 미국 등 5개국이 핵 및 방사성 물질을 운송할 때 보안을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 정상회의 1차 세션에서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5개국은 "핵 및 방사성 물질이 국내외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보안에 만전을 기울이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5개국은 핵 및 방사성 물질이 운송 도중 분실되거나 도난되면 위험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국가별로 핵물질 재고관리소와 국내용 핵물질 추적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임. 미국은 이른바 이 '공동협력사업(gift basket)'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과 관련 경험을 적극 공유하기로 합의했음.
- 이들 국가의 첫 실무회의는 내년 일본에서 열리며, 이 자리에는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운송 및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석함. 5개국은 공동 성명에서 보다 강력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able



Top Exercise · TTX) 등의 군사 훈련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훈련을 바탕으로 2년 후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 및 방사성 물질 운송 보안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 韓·美·프·벨, 'HEU→LEU 전환 협력' 공동성명(3/27)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각국의 다양한 핵물질 최소화 방안이 나오고 있음. 김황식 국무총리는 27일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미국 스티븐 추 에너지부 장관, 벨기에 조엘 밀게 부총리, 프랑스 베르나르 비고 원자력위원회 총재와 함께 고농축우라늄(HEU) 연료를 저농축 우라늄(LEU) 연료로 전환하는 공동 협력사업을 발표했다. 이번 4개국의 발표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주요 목적중 하나인 '핵물질 감축'의 모범적 협력 사례로 평가됨. 4개국 정상은 이날 "민수용 HEU 핵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밀도 LEU 연료 분말 생산 기술을 이용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김 장관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이 올해 말까지 제공을 약속한 LEU를 토대로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에서 개발한 원심분무기술을 이용, 내년 중 우라늄-몰리브덴 합금(U-Mo) 분말 100kg을 제조함. 한국이 생산한 이 U-Mo 분말은 프랑스로 넘겨져 고밀도 U-Mo 핵연료 제조에 쓰이며, 이는 각각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검증을 통해 고성능 연구로에 장전됨. 이들은 U-Mo 핵연료의 성능이 검증되면 다른 국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임.
- 연구로 핵연료는 민간 부문에서 HEU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로 매년 600kg 이상의 HEU가 약 20개의 고성능 연구로에서 사용되고 있음. 김 총리는 "민수용 고농축 우라늄 사용을 최소화하지는 핵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 4개국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자 한다"며 "4국의 지원으로 개발된 고밀도 저농축 우라늄 핵연료 제조 기술에 관한 국제적 협력 사업이 이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 日 미쓰비시重, 차세대전투기 개발 착수(3/28)

-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음. 이 통신에 의하면 미쓰비시중공업은 방위성으로부터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수주받아 시험기 제작을 시작했다.
- 시험기는 초음속의 소형 비행기로 총 연구비 392억엔(약 5천400억 원)이 투입됨.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과 저속에서도 방향 전환이 가능한 유연성 등 미래 전투기에 필요한 기술 개발에 활용됨. 미쓰비시중공업의 고바야시 다카시(小林孝) 항공우주사업본부장은 "시험기 제작의 목적은 순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 韓中日 외무, 4월7~8일 中서 北로켓 등 논의(3/30)

- 한국과 중국, 일본 외무장관은 오는 4월 7~8일 이틀간 저장(浙江)성 닝



보(寧波)에서 만나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광명성 3호 문제 등 지역과 국제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베이징의 중국과 일본 관리들이 29일 밝혔다. 이날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회담한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 스기야마 국장은 한중일 3국 아직 외무장관 회담의 구체적인 의제를 확정하지 않았으나 북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스기야마 국장은 우 특별대표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 오는 5월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자리이기도 한 이번 회담에서 외무장관들은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무역과 경제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한중일 정상은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정상회의 동안 FTA 협상의 개시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됨.

● "러, 올해 중 극동에 첨단방공미사일 배치"(3/31)

-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커져가는 가운데 러시아가 한반도와 인접한 극동 지역에 첨단 방공 미사일 시스템 'S-400 트리움프(승리)'를 올해 안에 실전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30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극동지역 공군·방공 통합 부대 사령관 세르게이 드로노프 대령은 "현재 부대의 주력 무기는 S-300 방공 미사일 시스템과 그 개량형들"이라며 "장비 현대화차원에서 올해 안에 S-400을 공급받는다"고 밝혔다. 드로노프 대령은 그러나 정확한 배치 시기와 장소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2007년부터 러시아군에 실전 배치된 S-400은 600km 거리에 있는 적의 전투기, 순항 및 탄도 미사일 등을 포착해 60~400km 거리에서 격추할 수 있는 첨단 방공 미사일 시스템임. 러시아에선 지난해 일본과 영토분쟁을 빚고있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에 S-400으로 무장한 방공 여단이 배치될 것이란 소문이 돌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극동 지역에 첨단 방공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려는 러시아의 계획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